

투데이 칼럼

‘집단적 체험’의 기억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아관적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1986년 서울대 출신 여성노동자 권인숙이 부친경찰서에서 문귀동이라는 형사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도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들 사건이 이미 집단적 기억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정적 ‘증거’는 없다. 가해자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문서상의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 ‘문서화된 자료’만을 유일한 증거로 받아들일 경우, 이 사건은 ‘가공된 사건’이거나 기껏해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고문사실을 부정하는 여러 명의 가해자와 고문피해를 호소하는 단 한 명의 피해자 사이에서 수량적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건들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까지 눈을 돌려야 한다. 상황은 집단적 체험을 유발하고, 집단적 체험과 기억은 다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1970,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상에서 수시로 국가보안법과 마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주쳐야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일성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김일성을 고무 찬양했다’는 죄로 둔갑하는 지독한 역설의 세계 속에서 살았고, 누구나 ‘취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 시대를 김근태, 권인숙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접하지 않고도 쉽게 믿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껏 공개적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고문경찰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니와, 설령 이들이 반성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 반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관계 전체를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정 직원이나 경찰 간부에게 직접 고문을 지시했을 리는 없다. 치안본부장이 고문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고문 경찰들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기껏 “고문을 했지만,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내용뿐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런 일을 ‘직접’,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해’ 지시하겠는가. 고문 경찰들에게도 고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하게 할 것인가 적당히 할 것인가를 선택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할수록, 고문경찰을 포상하고 고문하지 않는 경찰을 징계한 ‘권력’의 책임은 은폐되고, 책임 한계는 그들 내부에 국한된다. 국가권력은 ‘경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간접적 책임만 지면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성찰적 고백’도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할 수 있다. 지금도 일본 군부나 조선총독부가 ‘중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의욕적인 연구자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이 명

백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모집하라는 지시만 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위안부 모집 방법이라든가 모집 대상이라든가 하는 문제까지 시시콜콜 개입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들은 다만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자행된 취업사기와 강제 연행, 개인적 보복 등을 모른 채 해 주면 되었다. ‘위안부’를 모집한 자들이나 ‘위안부’를 찾은 병사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도 거기에 국한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들 사이에서 도덕성 회복의 열풍이 불어 ‘성찰적 고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나 해도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명백한 ‘증거’는 아마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어야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총체적 상황’에 대한 집단적 체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적 체험의 기억은 ‘민족’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가상’의 기억이 결코 아니다. 학대와 차별, 학살과 수탈이 ‘민족’을 경계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성된 집단적 기억이다. 그 민족의 ‘경계 밖’에 있었던 자들, 일본인과 이른바 ‘민족반역자’들은 결코 공유할 수 없었던 기억이다.

사설

전북 농산물 다른 나라 수출시작 확대해야

본보는 며칠 전에 전북 농산물의 일본 수출 타격을 우려하는 사실을 내보낸 바 있다. 타격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고 농정 당국에 대한 당부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신이라도 되는 듯 전북 농수산 식품의 수출이 순항 중이라는 뉴스가 올라왔다. 상반기 수출액이 1억7672만 달러로 전년도와 비교해 10.2%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수출액이 2466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37.8% 증가했다는 소식이 다. 그것은 듣기에 따라서 기업을 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반가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분명 한 것은 우리에게 긴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또 말하거니와 일본이 일으킨 수출 규제는 무역 도발이고 한국 경제에 대한 도발이고 한국 경제 주권에 대한 침략이다. 그 때문에 7월 한달 내내 국민적 분노가 뜨거웠다. 일본 관광 거부는 물론이고 일본 제품은 아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는 반일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의 강경한 반응에 내심 놀라면서도 안 그런 척 하고 있다. 오히려 한 번 물어보자는 투이다.

지금 한국인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 발 더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라는 일본의 관방 장관이 백색 국가 100% 제외를 주장하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말을 내뱉었다.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아 일본 정부는 뒤로 물러나거나 사과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의 아베 정부에 분기탱천해 있다. 따라서 반일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돼 한국과 일본 간에 민족 지존식 대결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보는 바로 그점을 염려해 농정 당국이 긴장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아직은 한국 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그 같은 일이 곧 발생하지 모른다. 지금 전북 농가들은 그 같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언제 타격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전북의 농정 당국 관계자들은 수출 타격 우려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부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분명하다. 전북 농정 당국은 농가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폭염철, 안전 생각해야

늦장마가 끝난 이후부터 한반도가 폭염으로 지글거리고 있다. 연일 체온에 육박하는 가운데 불볕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 1994년도와 지난해인 2018년에 비할 수야 없다지만 그래도 뜨거운 폭염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잇그제인 7월 31일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그동안 온열질환자가 15명이나 발생했다는 보도도 올라와 있다. 폭염철 건강을 위해 조심하는 마음이 요망되는 것이다.

폭염이 닥치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늘 보도되는 게 안전사고 뉴스인데도 상당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에 무심경하다. 그러나 이제 그러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에게 다친 불행이 자신과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해마다 피서지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서객들이 안전요원의 주의 사항 고지를 들은 척도 않고 있음이 그 주된 이유일 터이다.

안전하다싶은 풀장에도 지난날에 문제가 많았다. 안전요원이 자

기의 책무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빈번하게 확인되었던 것이다.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과실이 먼저 지적돼야겠으나 수영에 미숙한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것은 수영장 안전 요원의 책임이 크다. 안전하다는 수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안전 사고 예방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다. 공공 위생시설이며 수영장이 여름철 위생의 사각지대로 늘 지목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상한 음식을 날 것으로 먹는 것도 가법게 볼 문제가 아니다. 식중독이나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발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서지 요식업소의 위생 환경은 중요하다. 식재료며 음식물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세심한 마음 씀이 있어야겠다. 폭염이 보름 넘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각 지역마다 다양한 썸어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국은 도내 모든 피서지와 그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식품 업소들이 청결하지 마다 확인 작업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독자제언

자동차 방향지시등 생활화하자

자동차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흔히 ‘깜빡이’이라고 부르는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법적의무가 아니고 예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엄연히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무이다.

도로교통법에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은 잘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또한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3만

원)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면 다른 차량들이 예측하며 운전하게 하고 방어운전을 하게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준수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보복운전인데 최근 운전중에 사소한 시비들 이유로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선변경이나 속도를 줄일 때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켜면 상대방에게 나의 다음 행동을 알림으로써 미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조급해 할 것이 아니라 차량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생활화하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태훈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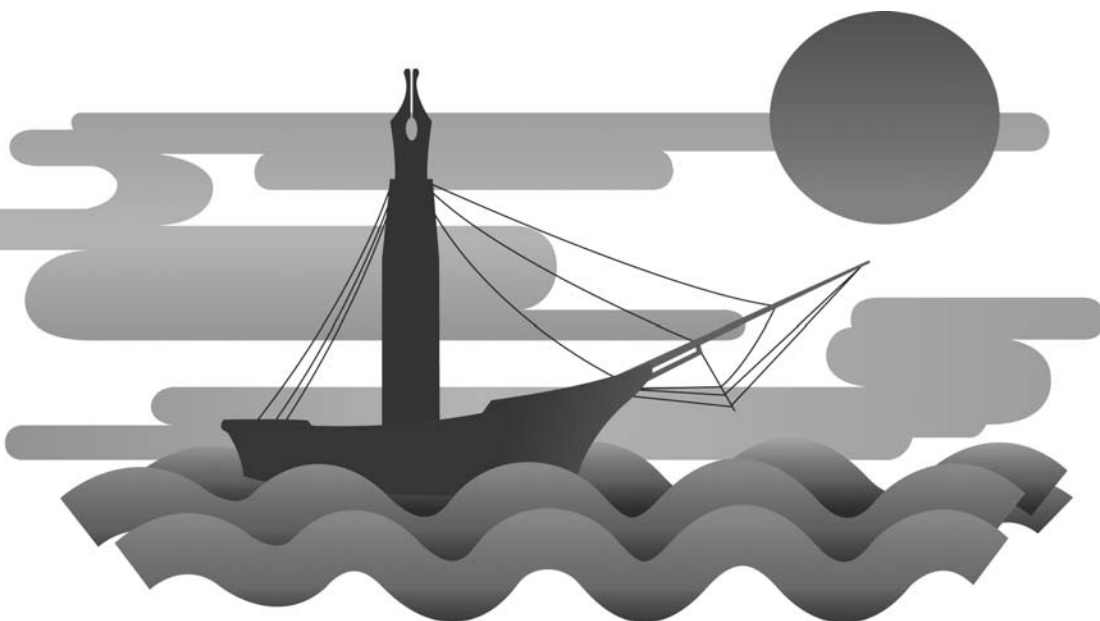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시위대 “사람들, 경찰 두려워하지 않아”



7월3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가 쿠드라체바(왼쪽)와 보리스 킨토로비치가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석하며 경찰의 강경 진압이 그들을 흔들리게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우리를 난폭하게 때리고 위협했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